

2006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 참여단체

강릉여성의전화	033-645-1002	수원여성회	031-241-7530
강화여성의전화	032-934-1903	시흥여성의전화	031-496-9390
경기여성단체연합	031-233-8673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5-6844
경남여성단체연합	055-282-9603	안양여성의전화	031-442-5385
경남여성회	055-282-9364	안양여성회	031-458-3050
고양여성민우회	031-919-1195	여성사회교육원	02-312-0872
광명여성의전화	02-2614-7370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02-824-7811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영광여성의전화	061-353-4994
광주여성민우회	062-529-0383	울산여성의전화	052-246-6712
광주여성의전화	062-363-7739	울산여성회	052-266-7159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062-361-6078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군산여성의전화	063-445-2286	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익산여성의전화	063-857-8163
기독여민회	02-312-7957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13
김포여성민우회	031-986-6008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인천여성의전화	032-527-0090
김해여성의전화	055-329-6450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053-471-6484	전북여성단체연합	063-287-3459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38	전주여성의전화	063-287-7324
대구여성의전화	054-471-6484	제주여민회	064-756-7261
대구여성회	053-421-6758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대전여민회	042-257-3534	진해여성의전화	055-546-140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1-5362	창원여성의전화	055-266-3722
목포여성의전화	061-283-4551	천안여성의전화	041-561-0306
부산성폭력상담소	051-558-8833	청주여성의전화	043-252-0966
부산여성단체연합	051-553-6645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부산여성사회교육원	051-802-6083	충북여성민우회	043-252-8124
부산여성의전화	051-817-4321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043-250-4477
부산여성회	051-504-6638	평화를만드는여성회	02-929-4847
부천여성노동자회	032-668-1011	포항여성회	054-284-0404
부천여성의전화	032-328-9713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02-325-6817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02-747-2442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서울남부여성민우회	02-459-3519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한국여성연구소	02-723-6206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0	한국여성의전화연합	02-2269-2962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3011	한국여성장애인연합	02-3675-9935
서울여성의전화	02-2272-2161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02-365-4279
성남여성의전화	031-751-2050	함께하는주부모임	053-425-7701
수원여성의전화	031-232-7780		

제작후원 : 한국여성재단

2006 지방선거, 11대 여성 정책 가이드라인

생활자치, 희망씨앗 여성이 뿌린다



여성연합발간 2006-10-(10)

CONTENTS

|여|성|정|책|가|이|드|라|인|

기증

- 1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 2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 3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농수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 등 3대 원칙에 맞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 4 여성장애인의 여성·장애·빈곤 등 중첩된 차별을 고려해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 5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노인요양 시설과 재가서비스를 확충해야 합니다.
- 6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정책을 실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한 이주·주거·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정|책|가|이|드|라|인|



- 7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 8 지역별 가족실태 조사를 통해 가족유형별로 요구되는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부모·국제결혼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9 빈곤 여성의 소득과 돌봄 노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10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해야 합니다.
- 11 지방자치단체는 부자치단체장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하고, 여성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성인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1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 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아이 맡기기 전쟁,
국공립보육시설 보내려 기다리지만 2년째...

아이를 맡기려 4~5곳의 보육시설을 돌아보았지만, 보다 저렴한 보육료를 내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국공립보육시설뿐... 그러나 이미 그곳은 몇 년째 대기자가 줄을 더 기다리고 있더군요...



현재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4.8%이고 전체 아동의 10.9%만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체 아동의 50% 이상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국·공립보육시설은 비용이 저렴한 뿐 아니라(민간시설보다 65~72%), 서비스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는 오히려 민간 보육시설과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경쟁력 있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일입니다.



© sunon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 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국공립보육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조례화해야 합니다.
- 영아·시간연장형·장애아 통합보육 등 수요자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정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교사·학부모·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40인 미만 어린이집까지 설치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합니다.
-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초과근무수당과 대체 교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학교 끝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지
막 얼마도 아바도 없는 텅 빈 집
에 혼자 있기가 싫어 밖으로 나가
봅니다. 친구들도 책 읽어야 라위
다 모두들 바쁘기봐요. 갈거리나
놀이터에서도 친구들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아아, 아바 퇴근하
기 까지 아직도 책 읽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배가 고파오네요.



현재 맞벌이 가정의 증가, 이혼율 증가, 근로빈곤층 증가, 지역공동체 붕괴 등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149만 원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10% 이상이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보호 교육대상 아동 추계를 158만 명으로 볼 때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서비스 대상 아동수는 6만여 명에 불과하여 필요아동의 4.0%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차별로 '학력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방과후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하고,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 방과후 아동 보호와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 저소득 가구 자녀에 대해 우선적으로 학령기아동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해야 합니다.

3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농수산물 사용·직영 급식·무상급식 3대 원칙에 맞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억한 냄새가 나는 조갯살이나 새우살"
"석유 냄새가 나는 홍합살"
"과리가 붙은 채 얼어있는 장어"

무슨 얘기냐고요? 최근 모 기관에서 급식용으로 납품한 수산물 식품 재료에 대한 일선 학교의 '클레임 일지' 내용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이은 급식 파동으로 인해 학교급식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만이라도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음식을 먹고 싶은 소망이 간절합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아이들이 먹는 급식만큼은 안전하게 관리해 줄 수 있을까요?

또 방학만 되면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난의 기간을 치르는 것이 종종 목격됩니다. 급식 예산 부족과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점심을 굶을 처지에 놓인 아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한창 잘 먹고 커야 하는 성장기의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굶지 않도록 결식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무료급식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우리농산물 사용·직영급식·무상급식 3대원칙이 반영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 방과후 아동급식,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등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무료 급식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4 여성장애인의 여성·장애·빈곤 등 중첩된 차별을 고려해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여성' 이어서 '장애인' 이어서 겪고 있는 이중의 차별은 너무 혹독합니다. 여성 장애인들은 성·가정폭력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장애인 전담 상담소와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들은 각종 직업훈련과 고용기회에서 배제되어 희망 없는 빈곤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장애인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의 9~10배에 달하는 28.8%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중첩된 차별문제와 다양한 욕구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복지서비스제 공과 일시적인 정책지원이 아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통격과 치맥, 빈곤에 시달리는 여성 장애인들은 바로 우리 이웃이자,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모자들에게
고맙습니다!

- 여성 장애인에게 교육, 상담지원, 자립생활지원, 직업훈련, 직업활동 지원 등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 지역별로 여성장애인 전문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여성장애인 정책개발이나 프로그램 적용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별 여성 장애인 실태 조사와 기초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5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확충해야 합니다.



"저는 10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봐왔습니다. 심지어 새벽 식사에 대소변도 받아냈지요. 그 와중에 예쁜 손자가 태어나 일하는 아들 며느리 대신 시어머니와 손자를 함께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형상이 가물가물하네요. 시계바늘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저도 치매가 아닐까요? 얼마? 이걸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현재 치매·중풍 등으로 장기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40만, 그중 긴급 보호가 필요한 최중증 요보호자는 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우리 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증 노인의 보호가 가족의 부담으로 맞닿아 있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 돌봄이란 말은 마치 메아리 같습니다.

우모자들에게
고맙습니다!

- 공공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확충하여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의 연계활동을 통해 노인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 건강관리 체계 및 대책을 지원해야 합니다.

6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정책을 실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한 이주·주거·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전 그녀의 노가다가 열렸습니다. 노사 상태에 바짓대 21일째, 사망 판결을 받은 지 5일 만에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녀는 덩어리처럼 누워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떠나고 싶었고, 공부도 하고, 직업교육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있던 처였습니다. 그녀의 소중한 생명은 그렇게 한순간의 화자로 인해, 사회적 무관심과 범죄 속에 애들하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2005년 3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1,071개의 성매매 업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736명의 여성이 여전히 갈취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휴게텔, 안마시술소 등 각종 유흥업소에서 많은 여성들이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된 채 여전히 절곡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폐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성매매 집결지 업소의 71.8%가 무허가이며, 28.2%는 유흥주점 등의 허가를 받고 변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성매매 업소들은 단속을 당하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강력한 폐쇄 정책과 함께 성매매여성의 자활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각 지역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을 폐쇄하고, 유사 성매매업을 하는 일부 노래방이나 휴게텔, 안마시술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의 종합지원 대책과 예산확보, 사회자원 연계망 구축을 통해 탈성매매를 위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suwon

7 성폭력·가정 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들의 천국, 실제 성폭력 발생률 세계 1위, 대한민국 전주소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일방적인 스킨쉽?”

“아름다운 꽃을 만지면 만지고 싶은 것은 자연스런 본능?”

하루가 다르게 엇기적인 성범죄 및 폭력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군대에서, 가정집에서,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폭력의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담소에서 연간 7만 여건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을 받고 있으나 실제 신고율은 채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국 성폭력 신고건수는 2004년 기준 1만 4천 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자활에 이르는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위기 시 지원체계와 홍보 등의 문제를 각 지역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자치단체와 사법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운영에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망을 형성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 내 예방 및 홍보, 피해자의 안전계획 수립,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취업, 피해자동이나 피해자가 사실상 부양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 지원, 지역 내 연계망의 업무를 위한 지침 수립, 피해자 공동 지원 사례 관리 등의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8 지역별 가족실태 조사를 통해 가족유형별로 요구되는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부모·국제결혼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부모 여성가장과 한부모 가족을 결핍되고 비정상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당당히 살아가려고 해도 쏟아지는 편견의 눈과 잣대가 무섭더군요."

(한부모 여성)

"나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의 냉정함을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느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난 같은 반 학생들의 놀림, '다름'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싸늘한 시선은 어린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청년)



© su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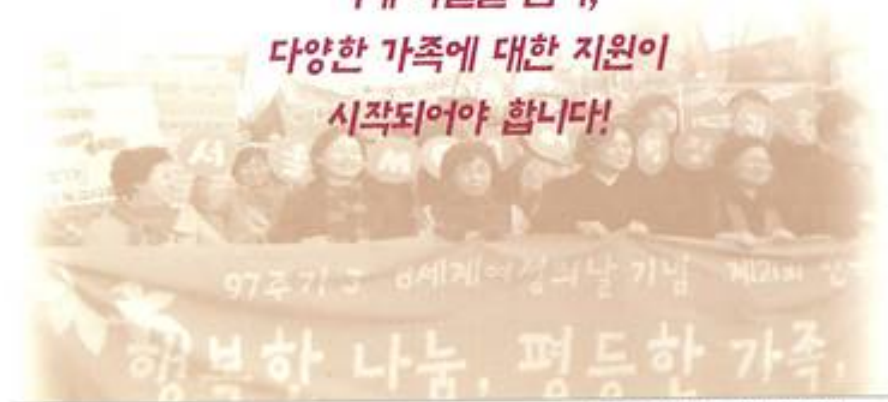


- 한부모 가족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문화·경제·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글·문화교실 등 한국문화와 각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 가족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지역·가족유형별 요구조사를 통해 지역 구성원의 요구에 기반한 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상담소,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해 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 농촌에서는 10명중 4명이 아시아인들과 국제결혼을 하고 있고, 2020년까지 혼혈인 출산이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핵가족의 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은 68.8%, 한부모 가족은 9.9%, 부부가족은 21.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9 빈곤 여성의 소득과 돌봄 노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여성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그 시점에
빈곤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율이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대빈곤층의 증가는 고층이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런 사회적 양극화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집단이 바로 여성입니다.



- 빈곤 여성과 여성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용직 형태의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 빈곤 여성의 돌봄 노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지역내 국공립보육시설, 학령기 아동 보호 및 교육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 지역내 가시지원·간병 등 비공식 부문의 노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지역내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 장애인 통합교육 보조원 제도의 도입·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 빈곤 여성의 직업훈련기간 급여를 현실화하고, 직업훈련 및 구직 신청시부터 취업 후 상담까지 연계하는 1:1 Non-Stop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10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상동네를 정월하다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땀으로 모아온 돈으로 임대보증금을 가짜스로 마련하였어요. 그런데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몇 달 동안 먹지 않자리를 극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생필품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한 강이 어쨌든 저지애 밀린 임대료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국민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이 영구 임대주택에 비해 6-7배나 높고 월 임대료는 2-3배 높습니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2,000-3,000만원이 넘는 임대보증금과 한 달에 20만원이 넘는 임대료 부담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소득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차등 부과해야 합니다.



-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가구원수에 따른 다양한 평형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이 실업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에 처했을 경우, 전세비 저리 융자, 긴급 주거비 지원 (월세, 전기, 수도, 난방 등)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11

지방자치단체는 부자치단체장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하고, 여성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성인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성 총리도 탄생했고 문화·스포츠 분야는 물론 각종 시험에서 여성의 파워를 실감하게 하는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은 어떤가요?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개발지수는 2005년 현재 세계 27위이며, 여성권한척도는 세계 5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시아태평양 13개국 중 태 밀바닥인 13위라고 합니다.

11대 여성 정책 가이드라인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직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5.9%에 불과하고,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여성 부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광주 광역시 단 한 곳 뿐입니다.

여성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성예산은 16개 광역 시·도 전체 예산의 1.3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이 함께 행복한 나라는

아직도 우리에게 먼 일일까요?



-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0%가 될 때까지 채용목표제를 확대하고 승진목표제를 실시하는 한편, 부자치단체장 중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마련, 성인지 예산 확대 등 성인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5YES, 5NO

맑은정치 생활정치 새바람~~~~~오(5)~~~~~예(yes)!

오, 예스! 유권자 참여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
적극적인 나의 한표로 세상을 바꾼다!

오, 예스! 맑은정치 여성참여

지역에서 여성의 적극적 참여로 성평등한 정치,
맑은 정치 만들기!

오, 예스! 투명한 후보

청렴하고 깨끗한 후보 선출로
투명한 정치풍토 만들기!

오, 예스! 실천하는 공약

공약으로 말하고 실천하는 후보를 통해
새로운 정치문화 만들기!

오, 예스! 풀뿌리 정치

풀뿌리 정치 정착을 통해
나눔과 돌봄이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정치풍토를 더럽히는~~~~~오(5)~~~~~노(No)!

반인권 후보 노!

여성 및 사회 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후보는 이제 그만

무관심한 유권자 노!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이제 그만

연고주의 노!

지역, 학연, 고향을 묻는 것은 이제 그만

부패정치 노!

금권, 타락 정치는 이제 그만

낡은 정치문화 노!

패거리 정치, 힘의 정치는 이제 그만



5.31 유권자 실천행동

2006 지방선거에 바라는 유권자의 5가지 바람

바람 1 유권자 참여

바람 2 맑은정치, 여성참여

바람 3 투명한 후보

바람 4 실천하는 공약

바람 5 풀뿌리 정치

유권자의 3가지 생활의 발견

생활의 발견 1 여성공약 살펴보기!

직장, 친구, 공동체가 함께 자신의 지역 후보 공약 중 여성관련공약을 비교하며 살펴보기!

생활의 발견 2 맑은 정치 새바람 여성후보 지지 선언하기!

나의 블로그, 싸이, 메신지 등 온라인에 맑은 정치 새바람 여성후보 지지 선언 글 남기기!

생활의 발견 3 선거 전에 주위 친구들에게 투표참여 권유 문자 보내기!

선거 참여로, 우리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유권자의 1가지 행동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기!

5월 31일 하루!

우리가 행동하는 날,

우리의 꿈을 실현해 봐요!

“이제는 여성이다! 생활자치 살려내자”

돌봄정치, 맑은정치 여성이 해내자!

지방자치 여성 참여 확보하자!

연고정치, 부패정치 여성이 청산하자!

맑은정치

돌봄정치
생활자치

여성행동